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7-3

(공개)

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

[장례 · 산후조리]


2023. 11. 27.

관계부처합동

[요약]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

1 추진배경

- 그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활성화, 디지털화 전략 등 마련, 바이오헬스, 콘텐츠 등 유망 업종별 핵심 과제도 지속 추진
 - 이에 더하여,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 지원 노력도 강화
 -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우리 경제내 높은 비중*에 비해 생산성** 低
→ 업종별 균형있는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
- * 고용비중('22, %) : (정보통신) 3.5 (도·소매) 11.8 (음식·숙박) 7.8 (기타서비스) 4.3
** 1인당 노동생산성('21, 만달러) : (제조업 전체) 13.8 (서비스업 전체) 6.6
(금융·보험) 17.5 (정보통신) 11.8 (전문과학) 7.3 (유통·음식숙박) 3.8 (기타서비스) 2.5

 **장례,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, 업계 간담회*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지원 방안 최초 마련**

* 상조협회, 한국산후조리원협회, 장례문화진흥원·장례협회 등

2 장례 서비스

- **(현황)** 장례서비스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*하고, 친환경·디지털화 등 新서비스 창출이 활발한 유망 산업
 - * 사망자 수 : ('20) 31만명 → ('30년^e) 41만명 → ('70년^e) 70만명
 - 기존 인프라 확충 중심의 정책은 화장문화 정착* 등 일부 성과, 장사문화 변화에 맞는 서비스 다양화 및 新서비스 활성화 추진 필요
 - * 화장률 : ('11) 71% → ('18) 86.8% → ('21) 90.8% ('22년까지 90% 목표 既달성)
 - **(정책과제)** 규제개선 등 제도기반 마련, 우수 인증제도 도입 등 서비스 품질 제고, 친환경·비대면 장례 등 新서비스 창출 지원
- ① 지원체계 마련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**
-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,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*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(~'24.3월, 기재부 연구용역)
 - * 상조회사는 현재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되고 있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

- '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(30년)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(복지부)
- * 현행 「장사법」 내 법정 설치기간(19조) 및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(20조)을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부터 적용중
-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 간소화(복지부)

②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-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(복지부)
- * (예)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우선지정, e-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우수 인증기관 및 검색결과 우선표시, 의료기관 인증·평가제도와 연계 검토 등
-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* 지정절차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(복지부)
- *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장례 및 장사시설 이용편의 제공하는 시설
-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·고도화(공정위, 복지부)
- * ①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, 재무정보 등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(공정위)
- ② 장례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e-하늘 플랫폼 고도화(복지부)

③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 통한 **신서비스 활성화**

-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* 도입, 산분수목장·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**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 조사·연구(복지부 연구용역)
- * 연소냉각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화장로 → 가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장효율 高
- ** 산분수목장, 해양장 등을 제도화한 「장사법」 개정안 상임위 통과('23.9월)
- 웰다잉(Well-dying) 트렌드에 대응하여 사전장례의향서*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복지부)
- * 생애 말기 스스로 장사방식(매장·화장 등), 빈소유무, 장례장소 등 결정하는 제도
-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,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은 우수기관 인증시 가점 부여 검토(복지부)
- 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 신규 제공(복지부)

3 산후조리 서비스

- (현황) 산후조리 서비스는 핵가족화, 산모 고령화 등에 따라 산모의 수요가 높은 분야*이며, 중국 등 해외에서도 빠르게 성장중**

*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 : (산후조리원 '21) 81.2% / (정부지원 산후도우미, '21) 49.6%

**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규모(억위안, KOTRA) : ('14) 47 → ('18) 92 → ('21) 97

→ 산후조리는 산모들의 필수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중이나,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의 지원은 미흡

- (정책과제) 맞춤형 정보제공 등 성장인프라 구축, 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, 컨소시엄 해외진출 등 수출 활성화 지원

①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

- 산모·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*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(간호사간호조무사 등) 개선방안 마련(복지부 연구용역)

* 업계는 간호사 부족 등으로 고려하여 1인 이상 간호사 상시근무 기준 등 개선 건의

-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·경영에 필요한 정보(유사업종 현황, 매출액 등) 신규 제공(중기부, 복지부)
-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,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(~'24, 복지부)

②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

-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*을 위해 작성가이드 보급 및 우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(복지부)

* '15년 「모자보건법」에 평가제도 근거 등이 마련되었으나, 업계의 준비부담 및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평가제도 시행이 지연중

- 우울증 관리, 초기양육 교육 등 산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산후조리원 신규 서비스 개발·보급(복지부 연구용역)
- 임신·육아 종합포털(아이사랑)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기관) 정보 신규 제공
 - * (조리원) 가격·평가결과·인력·시설구성 등 (제공기관) 품질평가 등급, 제공인력 보유현황 등
-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과정 연계*를 강화하고,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 신설(복지부)
 - * 아이돌보미 등 유사업무경력 있을 경우 간소화된 경력자과정(60→40시간) 별도 운영

③ 유망시장 조사 및 K-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한 수출 활성화

- 국가별 보건환경·출산율, 既진출 산후조리원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유망 진출시장 선정* 및 수출전략 수립(~24.3월, 기재부 연구용역)
 - * (예) 중국·미국 등 既진출국가, 몽골·베트남 등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모델 있는 국가, 태국·UAE 등 국제협정을 통해 산후조리서비스 분야 개방된 국가 등
- 병원, 산후조리원, 육아용품·뷰티서비스·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 및 동반 수출 지원(복지부, 중기부, 산업부)
 - * (예) 의료기관·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심사시 가점 부여
- KSP 등을 활용하여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·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 검토(복지부, 기재부)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업종별 추진 과제	2
III. 장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	3
1. 현황	3
2. 정책과제	4
IV.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..	10
1. 현황	10
2. 정책과제	11

I. 추진배경

□ 정부는 그간 서비스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,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

○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* 및 디지털화 전략** 마련,
바이오헬스, 콘텐츠 등 유망 업종별 핵심 과제***도 지속 추진

* 서비스수출 활성화 전략(6.5일, 서비스TF) / **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(7.21일, 비경)

***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,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

○ 아울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
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입법도 지속 추진중

□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,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 지원 노력도 강화

* 도·소매, 음식·숙박, 개인서비스(산후조리, 장례, 이·미용 등) 관련 업종을 통칭

○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우리 경제내 높은 비중*에도 불구하고
他업종 대비 낮은 생산성** 보유

* 고용비중('22, %) : (정보통신) 3.5 (도·소매) 11.8 (음식·숙박) 7.8 (기타서비스) 4.3

** 1인당 노동생산성('21, 만달러) : (제조업 전체) 13.8 (서비스업 전체) 6.6

(금융·보험) 17.5 (정보통신) 11.8 (전문과학) 7.3 (유통·음식·숙박) 3.8 (기타서비스) 2.5

○ 국민 일상 생활에서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,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
균형있는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

→ 장례, 산후조리 분야를 1차 대상으로 선정, 업계 간담회* 등
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방안 최초 마련

* 상조협회, 한국산후조리원협회, 장례문화진흥원·장례협회 등

□ 앞으로도 기존 유망 업종 및 생활밀착형 업종의 현장 애로, 건의
등을 토대로 국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산업 정책 지속 추진 계획

Ⅱ. 업종별 추진과제

☞ 장례, 산후조리 서비스가 新유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①제도적 인프라 확충, ②소비자 만족도 제고, ③新서비스 출현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

	장례서비스	산후조리서비스
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■ 설치기간 지난 분묘에 대한 처리방안 개선 ■ 자연장지 조성절차 간소화 ■ 무연고 분묘 조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 마련 ■ 빅데이터 기반 산후조리원 상권정보 제공 ■ 산후조리서비스 공급기관 애로사항 정기적 조사 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도화
소비자 만족도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사시설 우수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마련 ■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 ■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법제화 ■ 통합 상조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■ E-하늘 장사정보 플랫폼 내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■ 장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우울증 관리 등 산후조리원 내 서비스 다양화 지원 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■ 산후조리원·산후도우미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■ 돌봄 유사 경력자 연계 강화 및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
新서비스 출현 및 해외진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사방식 선진화·다양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·연구 ■ 웰다잉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■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 친환경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 ■ 온라인 추모서비스 고도화 등 비대면·디지털 장례서비스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후조리원 유망 진출시장 조사 및 수출 지원방안 마련 ■ 병원·산후조리원·연관 산업체 컨소시엄 수출 지원 ■ KSP 등을 활용하여 산후조리 문화 선제적 보급

Ⅲ.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

1 현황

□ 장례서비스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*하고, 친환경·디지털화 등 新서비스 창출**이 활발한 유망 산업

* 사망자 수 : ('20) 31만명 → ('30년^예) 41만명 → ('70년^예) 70만명

**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자연친화적 장례 선호에 따라 친환경 수의, 생분해 유골단지, 친환경 시신싸개 등 친환경 장례용품 산업 성장

○ 기존 인프라 확충 중심 정책은 화장문화 정착* 등 성과, 장사 문화 변화에 맞는 서비스 다양화 및 新산업 활성화 추진 필요

* 화장률 : ('11) 71% → ('18) 86.8% → ('21) 90.8% ('22년까지 90% 목표 既달성)

① (제도·인프라) 새로운 장례서비스 수요에 맞춘 규제 개선 필요

▪ 상조산업은 전문 장례서비스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중*이나,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중이며 지원체계 無

* 가입자/선수금 : ('12) 351만명/2.5조 → ('18) 516만명/4.8조 → ('23) 827만명/8.4조

▪ 화장 문화가 보편적 장사방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 확산 등 新장사문화에 발맞춘 매장 관련 규제개선 필요

② (서비스 품질) 평가인증 체계 부재 및 공급자 편의적 정보 제공체계

▪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'09년 장례식장에 KS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업계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제도 안착 미흡

▪ 상조회사, 장사시설에 대한 나열식 정보제공*으로 소비자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 한계

* (예) '내상조찾아줘' 상조정보플랫폼은 72개사 중 조합에 가입한 34개사 정보만 제공중

③ (新서비스) 친환경, 비대면 장례 등에 대한 국민 수요 변화에 대응 필요

* (예) 장례식장 다회용품 사용 의향 비율 43.9%, 온라인 추모 의향 비율 43.8%

☞ **산업발전 기반 구축, 서비스 품질 제고, 새로운 장사문화 대응을 통해 新서비스 다양화 및 국민에게 만족도 높은 장례서비스 제공**

2 주요 추진과제

◇ 지원체계 마련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

□ 업계 건의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

- (현황)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「할부거래법」(공정위)의 규제 대상으로 등록제·선수금 보전제* 등 적용 중

* 자본금 15억원 이상만 등록 가능, 선수금의 50% 금융기관 예치 등 의무화

- 후불제 상조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미흡하며, 상조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
- 또한 보험업과 달리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이며 신규 자금조달 등에 애로

연장의
박소리

현재 일반 회계기준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자본조달 등 한계 → 상조산업 특성을 반영한 회계지표 개발 건의

- (정책과제)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,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(~'24.3월, 기재부 연구용역)

□ 업계 건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처리방안 개선

- (현황) 현행 장사법상 '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정 설치기간(30년) 종료 후 지자체장 등이 철거 및 화장·봉안 처리 가능

- '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의 경우 법정 설치기간이 적용되지 않고,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규정도 부재 →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

연장의
박소리

'01년 이전 설치분묘는 설치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묘지 정비 곤란
→ 효율적인 묘지정비를 위해 '01년 이전 분묘의 처리방안 마련 건의

- (정책과제) '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(30년)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 검토(복지부)

□ 묘지 내 자연장지*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

*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,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

○ **(현황)**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묘지면적변경 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

▪ 자연장 확산 트렌드에 대응하여 묘지정비 및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절차 간소화 필요

○ **(정책과제)**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하여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 간소화(복지부)

* 「장사법」 제14조·제16조, 시행령 제13조·제20조

: (現) 간소화 규정 부재 → (改)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

□ **업계 건의**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절차 개선

○ **(현황)** 묘지정비가 가능한 무연고 분묘로 인정받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묘지 연고자 조사 관련 법적 공백 존재

▪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연고자 조사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묘지 연고자 조사가 지연*

* 개별법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권한 규정 → 법원행정처장 승인 → 열람 가능



분묘 연고자 조사를 위해 소관 지자체가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 →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시급

○ **(정책과제)**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(복지부)

* (現) 「장사법」 규정 부재 → (改) 묘지 일제조사(제11조) 및 무연분묘 연고자 조사(제27조) 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 가능 조항 신설

◇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

□ 장사시설 대상 우수 인증제도 도입

- (현황) 장사시설(장례식장·화장·봉안·자연장지 등)의 설비, 인력·서비스, 위생 등에 대한 통합적 품질 관리제도 부재
- (정책과제)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(복지부)

< (예시) 우수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>

- 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시 우선 지정
- ② 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우수인증 기관임을 표시하고, 검색결과에 우선적으로 표시
- ③ 의료기관 장례식장 인증 시 해당 의료기관 평가·인증과 연계방안 검토

□ 업계 건의 상조회사 모집인* 등록제 법제화

*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계약 체결 중개자(보험업법의 보험설계사와 유사)

- (현황) 모집인의 부실한 상품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 발생 → 상조협회 중심으로 모집인 등록제 운영중이나 활성화 한계



상조협회 중심으로 모집인 등록제를 운영중이나, 상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제도 정착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 →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 건의

- (정책과제)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 검토(공정위)

□ 업계 건의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* 제도 법제화

* 해당 지역에서 재난·재해 등으로 대규모 사망자 발생시 재난현장 지원, 사망자 장례수행, 장사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

- (현황) '17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신설하여, 현재 200여 개소 지정되었으나 강제성 부재로 실제 운영 한계



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안치 거부 등 발생해도 제재 한계 → 법제화 건의

- (정책과제) 「장사법」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 절차·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(복지부)

□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

- **(현황)**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정보 등을 비교·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이 부재
 - 기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제공 창구가 있으나, 조합 회원사가 아닌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한계*
- * 등록 상조업체 72개사 중 공제조합 가입 상조회사는 34개사('22년)
- **(정책과제)**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,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검토(공정위)

상조회사 관련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(안)

	현행	개선
운영주체	상조공제조합	공정위
정보제공 대상범위	상조공제조합 회원사인 상조회사(34개사)	할부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(72개사)
위반신고·민원제기	공정위 홈페이지 등 별도 창구 필요	해당 플랫폼에서 원스톱 처리

□ E-하늘 장사정보 플랫폼 고도화

- **(현황)** '10년부터 장사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E-하늘 플랫폼 운영중이나, 공급자 편의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발생
 - 상조회사 정보 부재, 단순 시설별 장례용품 가격 나열 등으로 소비자가 각 장례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 획득 곤란
- **(정책과제)** 통합·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편(복지부)

E-하늘 장사정보 플랫폼 고도화(안)

	현행	개선
특징	공급자 중심 병렬·나열적 정보	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
기능	지역별 장사시설 검색 → 각 시설별 장례용품 및 가격 나열	장례 단계별 장사시설 선택 → 예상가격·이동거리 등 제공
상담	장례문화진흥원 유선상담(9시~18시)	챗봇 도입 통한 실시간 상담

□ 장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

- (현황) 현재 장례지도사는 교육과정 이수하면 자격 부여중, 상조회사 등은 장례식장 종사자와 달리 교육 이수 의무 無
- (정책과제)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* 및 보수교육 도입,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 추진(복지부)

* (現) 무시험, 교육이수시 국가자격 발급('12~) → (改) 시험 통과 필요('25~)

◇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 통한 **新서비스 활성화**

□ 장사방식의 선진화·다양화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연구

- (현황) 화장시설은 전체적으로 공급여력은 있으나, 대도시 중심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효율성도 하락
- * '27년 화장로 수급전망 : (전체) +35.2 (서울) △8.7 (경기) △29.0 (부산) △7.4

- 또한, 새로운 장사방식(산분수목장, 해양장 등) 도입*에 발맞춘 새로운 시신처리 방식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필요

* 산분수목장, 해양장 등을 제도화한 「장사법」 개정안 상임위 통과('23.9월)

- (정책과제)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연구
-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하여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* 등 도입(복지부)
- * 연소·냉각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화장로로 가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일반 대차식 화장로 대비 화장효율이 높다는 장점 보유
- 산분수목장,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신처리방식 조사·연구(복지부 연구용역)

□ 웰다잉(Well-dying) 트렌드에 대응한 제도 마련

- (현황) 웰다잉 문화와 연관된 신직업·Death Tech 산업 성장중
 - * (日) 슈카츠(임종준비) 관련하여 엔딩노트, 시니어 라이프 매니저 등 신산업 출현
- (정책과제) 사전장례의향서 제도*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**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추진(복지부)
 - * 생애 말기 스스로 장사방식(매장·화장 등), 빈소유무, 장례장소 등 결정하는 제도
 - ** (예) 연명의료 결정, 상속·유언장 작성,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

□ 친환경(Green)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 강화

- (현황) 美·英·日 등 해외에서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, 친환경 장례절차 등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는 '장례식장의 그린화' 확산
 - * 친환경 장례(Natural burial, Green burial) : 묘비·석관 최소화, 유해물질 사용 금지, 시체 방부처리 절차 제외 등을 통해 매장하는 자연 친화적인 장례
- (정책과제)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 신설
 -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 검토(복지부)
 - 장례식장 종사자·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*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 포함(복지부)
 - * 장사지원센터에서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의무교육 시행(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5)

□ 비대면·디지털 장례서비스 제공 확대

- (현황) 코로나19 등을 통해 조문 감소, 온라인 추모가 확산*되고, AI·VR 등과 결합한 新장례서비스**에 대한 수요도 증가
 - * 조문 횟수 감소 55.9%, 온라인 추모 의향 있음 43.8%(21 장례문화 국민인식조사)
 - ** (예)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인의 모습을 구현하고 유족에게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
- (정책과제) 現 e-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·개편*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(복지부)
 - * (예) 現 단일화된 3D 가상 추모관 → 改 실제 장지 모습 구현한 추모관 서비스 제공 등

IV.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

1 현황

- 산후조리 서비스는 핵가족화, 산모 고령화 등에 따라 산모의 수요가 높은 분야*이며, 중국 등 해외에서도 빠르게 성장중**

*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 : (산후조리원, '21) 81.2% / (정부 산후도우미, '21) 49.6%

**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규모(억위안, KOTRA) : ('14) 47 → ('18) 92 → ('21) 97

- 제공 형태는 크게 ①산후조리원(시설)과 ②산후도우미(가정)로 구분
→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률 및 선호도*가 높은 편

*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('21 산후조리 실태조사) : (산후조리원) 78.1% (본인 집) 16.9%

- 산후조리는 산모들의 필수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중이나,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의 지원은 미흡

- ① (제도·인프라) '06년 도입된 위생·안전 중심 규제는 소비자 수요 다양화 및 업계애로, 제도 공백 해소 등을 위해 개선될 필요

* (예)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수요가 높으나, 의사회진 범위·요건 등이 불명확 → 의사들의 진료기피 등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 한계

- ② (서비스 품질) 산후조리원은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*, 산후도우미의 전문성 강화 요구도 확대**

* 산후조리 장소별 선호도(%) : (산후조리원) 78.1 > (본인집) 16.9 > (친정) 4.6 > (시가) 0.1

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(점) : (친정) 4.2 > (산후조리원) 3.9 > (본인집) 3.7 > (시가) 3.6

** 산후도우미 필요 정부정책('21) : (경비 지원) 30.9% (자질·전문성 향상) 16.5%

- ③ (수출 활성화) 출산 고령화, 소비력 향상 등 산후조리 해외수요 증가
→ 중국 등 일부 해외진출중*이나,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등 지원 필요

* '20년 P사는 中 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산후조리원 브랜드 중국에 론칭

👉 **성장인프라 구축, 소비자 만족도 제고,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
新수출동력 확보 및 출산·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**

2 주요 추진과제

◇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

□ 업계 건의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 마련

- (현황)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·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·조무사로 제한하고, 간호사 상시근무 의무화

※ 산후조리원 인력기준(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3)

-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 (간호사와 영유아는 1 : 7, 간호조무사와 영유아는 1 : 2.5 비율로 고용 의무)
-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 의무, 다른업무 겸임 금지

- 인력 기준에 대해 수요자는 자격기준 강화*, 공급자는 간호사 부족** 등에 따른 기준 준수 어려움 등 다양한 개선 의견 존재

*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필요한 정책('21 산후조리 실태조사) : (비용지원) 51.3% (CCTV 설치) 16.9% (감염·안전관리 강화) 11.1% (종사자 자격기준 강화) 8.6%

**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(명) : (韓) 16.3 (美) 5.3 (英) 8.6 (스위스) 7.9



1인 이상 간호사 상시근무 기준은 간호사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 어렵고, 은퇴한 간호사 등의 형식적 고용으로 인해 안전확보 등 규제 효과도 반감 → 규제개선 건의

- (정책과제) 인력 수급현황, 업계 건의, 소비자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(간호사·간호조무사 등) 개선방안 마련(복지부 연구용역)

□ 산후조리원 상권정보 제공

- (현황) 산후조리원 창업·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상권분석, 업종정보, 관련 업계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약

* 현재 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상호명·주소·가격 등만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시중

- (정책과제)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·경영에 필요한 정보* 신규 제공(중기부, 복지부)

* 상권 내 동일업종 분포 현황, 평균 매출액, 유동인구 등

□ 산후조리 실태조사 고도화

- (현황) 3년 주기로 시행중인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산모 등 이용자 인식조사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부족
 - * (조사대상) 산모 약 3천명 (조사내용) 산후조리 장소, 지불비용, 필요한 정부정책 등
- 산후조리원,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종사자 현황, 운영형태, 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
- (정책과제) 현행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등을 포함하고, 운영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 조사(복지부)

□ 업계 건의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서비스 제도화

- (현황) 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*가 높지만, 의사회진 요건·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충분한 서비스 제공 한계**
 - * 의사 회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('21) : (전문가) 90.9% (산모) 71% (조리원) 62.8%
 - ** 의사 회진서비스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57%에 불과('21, 육아정책연구소)



방문진료가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사들의 진료 기피,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 현장 애로 발생 → 제도 공백 해소 건의

- (정책과제)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(~'24, 복지부)

◇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

□ 산후조리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지원 확대

- (현황)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요가 산모 건강회복 → 우울증 관리, 돌봄방법 습득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
 - 그러나,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서비스 개발 등이 미흡*하여 산후조리원은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**
- * 산후조리원 내 산후우울관리 교육('21) : (필요) 93% (실제 교육비율) 27.5%
- ** 산후조리 장소별 선호도(%) : (산후조리원) 78.1 > (본인집) 16.9 > (친정) 4.6 > (시가) 0.1
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(점) : (친정) 4.2 > (산후조리원) 3.9 > (본인집) 3.7 > (시가) 3.6
- (정책과제)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, 우울증 관리, 초기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 개발(복지부 연구용역)

□ **업계 건의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 및 활성화**

- **(현황)**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하였으나, 업계의 준비 부담 및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시행 지연*

* 「모자보건법」 근거 마련('15) → 시범사업 실시('17~'18) → 평가제도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 컨설팅사업 진행중('19~)



산후조리원들이 평가제도에 참여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필요

- **(정책과제)**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* 추진

* 현재 요양병원, 어린이집 등은 복지부의 평가 또는 인증을 의무로 규정

-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* 보급('23~, 복지부)

*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및 KS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협회가 '22년 개발

-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검토(복지부)

* (예) ①산후조리원 인력 대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, ②산후조리업자 법정 의무 교육비용 지원, ③육아·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

- 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·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「모자보건법」 개정 추진('25~, 복지부)

*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 20 : (現) 평가할 수 있다 → (改) 평가해야 한다

□ **산후조리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**

- **(현황)** 산후조리원·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가격·서비스 정보 제공중 → 통합적인 검색·비교 어려움

- **(정책과제)** 산후조리원·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(복지부)

- 아이사랑 홈페이지(임신·육아종합포털)*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) 정보 제공**

*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정원·프로그램·인력구성·평가결과 등 제공중

** (조리원) 가격·인력·시설구성 등 (제공기관) 품질평가 등급, 제공인력 보유현황 등

- 장기적으로 민간 산후도우미 제공업체, 여가부·교육부 등 他정부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통합 구축 검토

□ 돌봄종사자 연계 및 전문성 강화

- (현황) 유사 돌봄 경력자간 직종전환을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 및 산후도우미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 제기*

* 산후도우미 필요 정부정책('21) : (경비 지원) 30.9% (자질·전문성 향상) 16.5%

<주요 아동 돌봄 종사자 비교>

	정부 산후도우미	민간 산후도우미	정부 아이돌보미
돌봄대상	신생아(0~1개월), 출산 직후 산모(3개월)		3개월~12세 이하
주무부처	복지부	-	여가부
자격기준	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(40~60시간)	민간 자체 자격증 또는 무자격	양성 교육 이수 (100시간)
업무범위	산모 산후조리, 아이돌봄, 가사 서비스		아이돌봄 서비스

- (정책과제) 산후도우미와 유사업무 경력자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고,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추진
 - 돌봄관련 유사 업무경력*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(60→40시간) 별도 운영(복지부)
 - * 아이돌봄, 가사·간병 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활동지원 등
 - 신생아 건강관리, 수면교육 등 심층 교육과정을 마련하고, 민간 산후도우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(복지부)

◇ 유망시장 조사 및 K-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한 수출 활성화

□ 산후조리원 수출 유망시장 조사

- (현황) 중국, 미국 등에 일부 산후조리원이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에 대한 업계 수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 정보 부족
- (정책과제)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 실시
 - 국가별 보건환경 조사, 既진출 산후조리원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 마련(~24.3월, 기재부 연구용역)
 - * (예) 중국·미국 등 既진출국가, 몽골·베트남 등 산후조리원과 유사한 모델 있는 국가, 태국·UAE 등 국제협정을 통해 산후조리서비스 분야 개방된 국가 등
 - 현지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시장동향 제공(KOTRA)

□ 산후조리 관련 산업 컨소시엄 수출 지원

- (현황)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, 아기용품, 뷰티서비스 등 연관 산업이 많아 해외로 동반 진출할 경우 시너지 창출 가능
- (정책과제) 병원, 산후조리원, 연관 산업체(육아용품, 뷰티서비스, 디지털 헬스기업 등) 등 컨소시엄 구성하여 동반 수출 지원
 -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시 가점 부여(복지부)
 - *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(복지부, 최대 300백만원 지원, 컨설팅 제공 등)
 - 병원과 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법률·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수출 프로젝트 밀착 지원
 - 육아용품,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서비스와 연관된 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시 해외마케팅·홍보비 등 지원(중기부, 산업부)
 - *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(중기부), 해외전시회 지원(산업부) 등에 신청 후 선정시 지원 가능

□ 산후조리서비스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- (현황) 산후조리 서비스가 이미 보급된 국가(중국 등) 외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선행될 필요
- KSP 등을 활용한 산후조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문화 보급 및 개도국의 산모·신생아 건강 증진 가능
- (정책과제) KSP 등을 활용하여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·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 검토(복지부, 기재부)
 - * KSP 부처사업 제안제도 활용하여 사업 제안(복지부→기재부) → 수원국 등에 제안사업 전달(복지부→수원국) → 수원국 채택시 KSP로 사업추진 가능